

‘기대수익 큰데 처벌 약하니...’ 전남해역 무면허 양식장 난립

2020년 이후 총 247건 적발...김 82% 집중
수급 불균형 가격 하락·안전사고 우려까지
도 “불법 수익 환수 등 처벌 강화 지속 건의”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해역에 무면허 양식장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수익이 큰 반면, 처벌은 약해 매년 무면허 양식장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무면허 양식장 난립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어선 항로 침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 급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0일까지 무면허 양식 자체 단속 건수는 총 247건이다. 2020년 78건, 2021년 26건, 2022년 41건, 2023년 58건, 올해 들어 이달 10일 기준 44건으로 시·군 개별 적발 건수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단속된 247건 중 무면허 김 양식장이 204건으로 82.6%에 달했다. 이어 전복 22건(8.9%), 미역·다시마 등

기타 21건(8.5%) 순이다. 무면허 양식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 양식시설 설치가 지난달 초 중순부터 시작된 만큼 올해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무면허 양식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발에 따른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다. 무면허 양식장으로 적발되면 양식업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300~4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받는 등 실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300~400만원의 벌금은 김 한 줄만 불법 양식해도 벌이 들일 수 있는 액수다. 무엇보다 무면허 양식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가격 하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김에 이어 무면허 양식 적발 건수가 많았던 전복의 경우 소비 부진으로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규 어장 개발을 금지했지만 무면허 양식이 이어지면서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 밖에도 무면허 양식은 어선어업 조업 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밀식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김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식장 위치 선점을 위한 불법 양식시설 조기 설치까지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월18일 완도군 덕우도 서방 인근 해역에서는 163ha에 이르는 대규모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적발되기도 했다. 통상 무면허 김 양식시설 설치 8월 말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시기가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수은 상승으로 김 양식 종료 시점이 기존 5월에서 4월로 1개월 앞당겨지면

서 채취 횟수 또한 5~6회에서 3~4회로 감소한 게 무면허 양식장 난립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는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정박, 연안 시·군 합동 불법 양식시설 단속,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설명회 등 무면허 양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무면허 양식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남도는 불법 수익이 환수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강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은 처벌 강화 없이는 근절되기 힘들다”며 “검찰에 지속 건의해 올해부터 무면허 양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서원 기자



수능대박 ‘골든벨’을 울려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오전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교사와 후배들의 응원속에 수능 대박 ‘중’을 치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김애리 기자

“3만787명 광주·전남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대입 수능...의대 증원 N수생 21년만에 최다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광주 38개·전남 45개 시험장을 비롯한 전국 1천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관련기사 6편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수능에 재도전하는 최상위권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N수생 변수와 불수능 등 난도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수능 응시생은 전년보다 1만8천82명(3.6%) 늘어난 52만2천670명이다. 재학생 3만777명(65.2%), 졸업생 18만1천784명(31%), 검정고시 등 2만109명(3.8%)으로 21년 만에 N수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험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전년보다 0.7%p 하락했지만 규모로만 보면 2004학년도(18만4천317명) 수능 이후 가장 많다. 광주지역은 전년 대비 75명 늘어난 1만6천846명, 전남지역은 478명 늘어난 1

만3천941명으로 총 3만787명이 시험을 치른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탓에 줄었던 시험실 응시 인원 기준을 1개 시험실 당 2명에서 예전대로 28명으로 늘렸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갖고 온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계는 이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특히 4교시 한국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어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하겠다”며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씩씩 달려온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며 “수험생들도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 당일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덕고를, 김대중 도교육감은 나주 봉황고를 각각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담양 보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시개발 부지 투기 방지 위해 2027년 11월12일까지

전남도가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춘지구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기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72만1천㎡ 면적에 계획인구는 4천351명(2천559세대) 규모다. 전남개발공사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될 고서면은 광주 망월동과 담양 창평면 사이에 위치해 사실상 ‘광주생활권’에 속한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엔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한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7면
11월 입업인에 영암박문수 대표 9면
더 좁아진 광주·전남 취업의門 12면

JEONNAM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전라남도

전남 인기 체험상품 1+1 이벤트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녹테마레
담양 딜라이트
강진 가우도 쥘트랙 등

마감임박!!
예산소진시 종료!!

iOS·안드로이드

자세한 내용은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에서 확인하세요!

2024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

전남 숙박업소 이용 시
1일 최대 4만원 할인
(5일 최대 20만원 할인)

iOS·안드로이드